

봄철 산불 비상... 위기대응태세 가동

전북도,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선정
산림에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등 행정력 동원
송하진 도지사 "문제인식 최우선·예방에 총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봄철 산불예방 등 재해재난에 대한 특별대책을 가동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전북 비상근무체제 유지를 지시했다.
송 지사는 지난 5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전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

보가 발령되고,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시기(3~4월)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총력태세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강원 고성과 속초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정부가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전북도는 또 재해재난 유발이나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현재 산불이 집중되는 봄철 기온상승에 따른 동시다발 대형산불의 발생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등에 대

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산불에 가장 취약한 4월 첫 주말과 식목일·청명, 한식·정명 기간에 산불이 동시다발, 대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로 보고 산불예방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등 1,500명을 산불취약지에 전진 배치하고,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공중예찰 등 입체적 감시를 펼치고 있다.
매년 봄철에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들의 부주의가 꼽히고 있다.
이 시기에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도청 기자실에서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강승구 도민안전실장, 김용만 환경녹지국장, 마재운 소방본부장이 전북도의 대형산불 방지 특별 대책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전주시, 노후 산단 기반시설 정비 근로환경 개선

2022년까지 12억원 투입 이달 중 팔복동 친환경산단 중심 단계적 환경정비
내년부터 기린대로 인도설치 등 추진... 올해 19개 업체 중기 환경개선 전개

전주시가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에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지난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총 12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기반시설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산업단지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해 노후시설 정비와 휴식 공간 조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산업단지와 인근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일제 조사했다.
4월 중 기업들이 밀집한 팔복동 '친환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환경정비에 나선다. 우선 시는 기

업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산단 산책로를 정비하고, 올 하반기에는 팔복로의 노후공간을 재포장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2020년부터는 ▲기린대로(금학천) 인도설치 ▲금학천 좌안도로 재포장 ▲팔복로 인도정비 ▲전주연탄 감수로 인도정비 ▲신복로 인도개

설 등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 총 사업비 3억 2516만원(보조금 1억9510만, 자부담 1억3006만)을 투입해 총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도 전개한다.
강령구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기반시설 정비는 환경개선의 결실마 단계라고 생각한다"면서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 된 공업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사람·자연·산업이 공존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는 지난 5일 서노송예술촌 간지 킨에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봄 조성을 위한 통합 간담회'를 열었다.

전주 특례시 지정 사회적경제조직이 '앞장'

시, 특례시 봄 조성 통합 간담회 열고
전북 발전 범시민 서명운동 참여 결의

전주에서 활동중인 사회적경제·도시재생 활동가들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5일 서노송예술촌 간지 킨에서 김양원 전주시장과 전주시혁신센터와 전주사회혁신센터 등 사회적경제·도시재생 관련 조직 활동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봄 조성을 위한 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 특례시 지정과 관련 최근의 상황은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관계자들은 특례시 지정 서명운동 기간동안 전주 특례시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과거 1960년까지 전라북도는 전국인구의 10%를 차지할 만큼 활

력이 넘친 도시였으나 광역시 승격과정에서 배제돼 현재까지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지난해 특례시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가불균형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해 전주 특례시 지정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는 등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과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추가 징수 부담없는 재원 증가 등이 가능해 전주시 사회적경제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호철 기자

매일 INDEX
5면 - 태권도학과 해외취업 협약 체결
15면 - 도교육청 노사협의회 상건례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